

민주, 위원회·특위 풀가동... '조기대선 모드' 준비

다문화위원회·체육특위 등 출범 '혁신회의' 등 친명 원외조직 정비 김민석, 호남서 '조기 대선' 특강 전남도당, 지역위원 당원 결의대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각종 위원회와 특위를 줄줄이 띄우며 당 조직을 '풀가동'하는 등 '조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의 파면과 5월 조기 대선이 사실상 가시화했다고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남 중앙당 다문화위원회와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당 체육특별위원회 등 당내 기구들이 출범하는 등 전열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다문화위원회 축사에서 "단일민족이라는 오래된 틀에서 벗어나 다인종·다문화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는 시대적 과제이자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전국 직능대표자회의는 남인순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남 의원은 출범식에서 "원내 1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으로서 직능인과 함께 발대식을 통해 뛰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면 정책위원회가 정책협약도 맺고, MOU(업무협약)도 체결해서 반드시 숙원 정책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체육특위는 조계연 의원(여수 을)과 강신성씨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김민철 교수 등 체육 현

장 전문가 25명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을 했고, 24일엔 보육특별위원회와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출범했다.

당과 남녀노소, 각 직군과 분야를 연결하는 조직을 일제히 가동해 접촉면을 늘리기 시작한 것으로, 사실상 대선용 전열 정비라는 평가다.

친명(친이재명)계 '풀뿌리' 원외 조직도 잇따라 활동에 나서고 있다.

당내 최대 원외 조직이자 강성 친명계 인사들이 주축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지역별로 조직을 정비 중인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정책 제안 행사를 가졌다.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먹사니즘 전국 네트워크'도 지난

23일 발대식을 가졌다.

대선 공약 준비를 염두에 둔 정책 기반 다지기도 나서고 있다.

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노동·문화·예술·유아 교육 분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학회 등과 정책협약식을 열고 직장인 식대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아 '호남 역할론'을 펼치며 '집토끼 결집'에 들어갔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28일 오후 4시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 호텔 신관 2층 데이지스홀에서 '탄핵정국과 조기대선에서 전북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 자리는 전북 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정무직 당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탄핵정국과 향후 정치 지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호남의 역할론에 대한 강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8일부터 '무안·영암·신안' 지역위원회를 시작으로 3월 9일까지 10개 지역위원회 당원 결의대회를 갖는데, 지역위원회별로 필요할 경우, 당 지도부 특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내 조기대선 움직임과 관련, "당 입장에서 경우의 수를 준비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공당 입장에서 실무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읍선 A든, B든 플랜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무안공항 경쟁력 강화 중장기 대책 마련 시급”

전남도의회 공항 활성화 특위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대 등 필요

전남도의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26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도 관련 실·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무안국제공항 정상화 및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후속 조치와 안전 점검 계획을 비롯해 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나광국 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소속 도의원들과 전남도 장현범 기획조정실장, 유현호 관광체육국장,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에 앞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나광국 위원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전남도는 피해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안국제공항은 전남의 핵심 관문이지만, 이번 사고로 큰 위기를 맞았다”면서 “공항 정상화는 단순한 항공 노선 재개를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항공 안전 확보는 물론,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과 실국장들은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와 안전 점검 계획뿐만 아니라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대와 지역 관광 자원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했다.

오지현 기자

여야, 연금특위 합의... 내일 국정협의회 개최

APEC·국회윤리특위 등 구성도

여야는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배석한 국민의힘 박형수·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그 부분(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를 먼저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

로 했다.

앞서 국정협의회는 첫 회의만 양당 대표가 참석하고 이후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키로 한 바 있다.

이번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문제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하고자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끝내고 구조개혁은 장기 과제로 삼아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수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이밖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윤리특위·기후특위는 민주당이, APEC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3월 입시국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야6당, 명태균 특검법 처리 촉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야6당 의원들이 2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야6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3법, 오늘 본회의 처리될 듯

법사위 전체회의서 의결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

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동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결

림들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에 여야가 공감한 바 있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원전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주주에 대한 이사 총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총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 언행이 불일치하다”며 “상법 개정안만 해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다. 대통령도 심지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쟁을 그만두고 우리 공동체 미래를 위해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길 기대한다”며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미래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다.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